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27.08	↓ 코스닥	802.87
	(+5.46)		(-8.15)
↓ 금리 (미국 9년)	3.847	↓ 환율 (원/달러)	1310.10
	(-0.021)		(-0.50)

bhc 일등공신
박현중 회장 해임
각종 소송 부담 작용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재계 "기업·경제 무너질 것"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총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 붕괴
협력사 근로자들 일자리 상실할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

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

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

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의 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면에 계속)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간소비 부진 지속... 고용도 둔화 올해·내년 성장률 0.1%p 하향 전망

KDI '2023 하반기 경제전망'
설비·건설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
내년 취업자 21만명 증가 그칠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등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 견해를 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성장 전망을 지난 8월 제시한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 또한 기존 2.3%에서 2.2%로 0.1%p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대 성장(2024년) 전망은 2023년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다"며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2024년에도 전년

(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2만 명 늘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 내년에는 21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실업률 전망치를 올해(2.7%)보다 0.3%p 오른 3.0%로 제시했다.

설비투자·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등은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출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수출의 경우엔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측했다.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중국 경제 등의 대외요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으로 중국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할 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공매도 전면금지에도 잔고 1.4조 늘었다

여전한 공매도

6일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금지 조치 전보다 73% 늘어
거래 상위 종목 에코프로株
한투연 "예외적 허용 없어야"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뉴시스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적용된 시장 조성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주에 개입하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이었던 6일 공매도 잔고가 직전 거래일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돼 주목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11조7871억원에서 6일 12조488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6조2511억원에서 6조7249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개인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이 줄기는 했지만 기관 공매도 움직임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975억원으로 코스피에서 326억원, 코스닥은 1649억원이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3일 951억원에서 6일 16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3일보다 7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에서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이 15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는 에코프로형제주가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각각 184억원, 195억원씩이다. 7일에도 170억원, 140억원씩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2차전

지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은 올해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앞서 개미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2차전지주에 공매도가 물리면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지정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불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하은 기자 godhe@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사진 뉴시스)
▲ 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 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 김한길 "국민 삶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 이낙연 전 총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유효" (사진 뉴시스)
▲ 박진, 유네스코 총회 기조발언...부산박람회 막판 지지 요청